



현지 참가자가 말하는  
'왕은 없다' 시위  
2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3~6면

레바논  
전선  
7면

더한층  
극우화하는  
국힘 8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10면

난민법  
개악안 발의  
11면



# 휴전과 확전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 대량 학살 전쟁을 지속하는 드립코

**대중 저항이 유일한 희망이다**

관련 기사 3, 4면

# 현지 참가자가 말하는 '왕은 없다' 시위의 의의와 과제

올리비아 박 재미 한국인

3월 28일(토) 제3차 '왕은 없다(No Kings)' 집회가 미국 전역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로 열렸다. 주최 측 추산으로 하루 동안 무려 3,300곳에서 도합 800만 명 넘게 참가했다!

뉴욕시에서는 35만 명이 도심 대로 두 개를 꽉 채워서 시내를 마비시켰다(출처: Hands-Off NYC).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도 20만 명이 모였다. 세인트폴은 미네소타주 주도(州都)로, 지난 1월 말 이민세관단속국(ICE) 항의 운동이 분출한 미니애폴리스와 함께 '쌍둥이 도시'라고 불린다. 보스턴·시카고·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LA) 등 미국 주요 대도시들뿐 아니라, 인구 밀도가 낮은 알래스카·하와이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필자가 있는 지역에서도 수천 명이 지방법원 앞 공터에 모였다. 지역 ICE 감시단, 전쟁에 반대하는 전역 군인들, 삼삼오오 모인 대학생들, 대학원생 노조, 할머니들의 지역 모임 등 다양각색의 기층 조직들이 모였다. 다양한 세대와 인종이 한데 어우러진 축제 분위기였다.

시위대는 직접 만든 스티커와 호루라기를 나눠주고, 간식과 물을 나눠 먹으며 서로를 응원했다.(호루라기는 ICE 감시단 활동을 상징하는 물품으로, ICE 요원을 발견하면 이를 이웃들에게 알리는 데 쓰인다.)

집회에서 만난 한 이주 배경의 대학생은 집회에 참가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팔레스타인인 인종학살, 이란 전쟁 등이 벌어지는 지금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어요. 상황

**반트럼프 여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준 이번 대규모 집회의 기세를 몰아 위기를 겪는 트럼프에게 결정적 한 방을 날려야 할 때다**

에 불만이 있어도 거리 행동이 벌어지지 않으면 나만 이상하다고 느끼고 위축되기 쉽잖아요. 여기서 머릿수를 하나라도 늘려서, 이 상황이 전혀 정상이 아니고 당신들처럼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 반전(反戰) 정서

이번 '왕은 없다' 집회는 올해 1월 ICE 항의 운동의 여파와, 한 달간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에 반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벌어졌다. 그런 만큼 ICE 축출과 이란 전쟁 반대가 단연 핵심 구호였다.

물가 상승이 낡는 생활고, 팔레스타인인 인종학살 규탄, 엡스틴 파일 공개, 트랜스젠더의 권리와 여성의 권리, 표현의 자유, 아이들의 교육권 등 다양한 메시지를 담은 손팻말도 등장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구호는 없지만, 아래 구호가 여러 집회에서 널리 외쳐졌다.

"왕을 거부한다, ICE를 거부한다, 전쟁을 거부한다! 더는 참지 않을 것이다."

"왕을 거부한다, ICE를 거부한다, 파시스트 미국을 거부한다!"

"도널드 트럼프, 똑똑히 들어라. 우리는 이주민을 환영한다!"

## '왕은 없다' 지도부의 정치

이번 '왕은 없다' 집회는 지난해 10월 말 이후 약 5개월 만에 개최됐다. '왕은 없다' 집회는 지난해 6월 말에 처음 시작해 대략 분기에 한 번 꼴로 열려 왔다.

올해 1월 전국을 뒤흔든 ICE 항의 운동은 1월 30일을 정점으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운동 지도부들은 ICE가 미네소타에서 집중 단속을 멈춘 후 운동의 동원을 해제하고, 그 동력을 3월 말 '왕은 없다' 집회로 흡수시켰다. 한 달 간 동원의 공백이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이전 기사에서 ICE 항의 운동이 반(反)트럼프 운동으로 일반화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운동이(적어도 아직은) 그렇게 발전하지 못한 것이다.



이란 전쟁과 이민 단속 항의 운동의 여파 속에 최대 규모로 열린 '왕은 없다' 시위

'왕은 없다' 집회는 인디비저블과 50501, 무브온 등의 단체들이 발의하고, 각종 지역 단체들이 자기 지역에서 집회를 조직하는 구조다. 그래서 지역마다 구호나 정서에 차이가 있다.

집회 주도자들은 정치적 초점이 되는 특정 지역의 집회를 '주력 집회'로 삼는데, 이번에는 미네소타 집회였다. 주력 집회에서는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민주당 유관 인사들이 연단에 선다. 이번 미네소타 집회에서는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연방 하원의원 일한 오마,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 미네소타 부지사 페기 플래너건, 미네소타 법무장관 키스 앨리슨 등 민주당 인사들이 연단에 섰다.

버니 샌더스는 트럼프의 군국주의가 국내외로 연결돼 있다고 연설했다. 트럼프가 헌법에 반하고 부도덕한 전쟁을 벌이고, 군비 지출 때문에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국내 불만을 탄압하려고 "훈련 안 된 호전적 폭력배"를 이용한다고 규탄했다. 샌더스는 ICE 축출과 이란 전쟁 반대 구호를 외쳤다.

## 의의와 과제

'왕은 없다' 집회가 있던 날, 트럼프는 플로리다주의 골프 리조트로 휴가

를 갔다. 시위대가 항의해 봤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한 것이다. 지난번 '왕은 없다' 집회 때 트럼프는 왕관을 쓰고 헬기에서 시위대에 오물을 투하하는 AI 영상을 SNS에 올렸다. 이번에는 그만큼 역겹지는 않아도 치졸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트럼프는 취임 이래 최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그 자신이 일으킨 이란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을 공격하며 4주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지만, 국면마다 말을 바꾸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이 일으킨 전쟁의 전환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전쟁이 촉발한 생활고 위기, 경제 위기도 심각해지고 있다. 한 달 사이 국제 유가가 40퍼센트 넘게 상승하고 국제 교역망에 차질이 생기며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번 '왕은 없다' 집회는 트럼프의 이란 전쟁과 그것이 키운 위기 등 때문에 트럼프 반대 여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줬다. 이번 대규모 집회의 기세를 몰아 위기를 겪는 트럼프에게 결정적 한 방을 날려야 할 때다.

'왕은 없다' 주도 단체들은 이제 5월 1일 메이데이를 하루 행동의 날로 잡고 있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트럼프의 '포식성 헤게모니', 한계를 드러내다

도널드 트럼프의 문제는 그가 SNS에 쌍욕이 담긴 글을 올린다는 것이 아니다. 저질스럽고 인종차별적인 무리한인 그에게 지구상 모든 이의 생사 여탈권이 쥐어져 있다는 것이다.

4월 1일 그가 한 이란 전쟁 연설을 보라. 트럼프는 이란인들을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3,000년 된 문명에 대한 저질스런 모욕이라는 점은 일단 논외로 하자. 그가 사용한 이 표현의 유래는 무엇인가?

1965년 미군 장성 커티스 르메이는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에 있는 미국 괴뢰 정권과의 전투를 중단하지 않으면 폭격으로 북베트남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썼다. 공군 참모총장 재직 중 르메이는 여러 차례 소련과 핵전쟁을 벌이려 했다.

1968년 대선에서 르메이는 인종분리주의자였던 조지 월리스의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그 대선에서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이 승리했다. 그러나 4년 후 닉슨은 르메이의 슬로건과 크게 다르지 않게 행동했다.

북베트남에 미국의 종전 조건을 강요하기 위해 닉슨은 B-52 폭격기 수백 대를 동원해 베트남의 발전소·공장·병원·창고·철도·학교 등 민간 시설을 파괴했다. 지금 트럼프가 이란에 가고 있는 위협과 정확히 같았다.

하지만 북베트남은 닉슨이 요구하는 타협을 거부했다. 베트남에서 빠져 나오는 문제가 절박해진 닉슨이 북베트남과 결국 합의한 내용은 앞서 미국과 북베트남이 합의했지만 그 자신이 썼던 것과 같은 내용이었다. 합의 얼마 후인 1975년 4월 북베트남 군대는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을 장악했다.

역사상 가장 강대한 제국이 단호한 민족주의 운동에 패배한 것이다. 바로 그 제국이 이란 이슬람공화국에서 비슷한 운동에 또다시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의 허풍과 달리 이란에서 정권 교체는 없었다.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이 잇따라 표적 살인을 벌인 결과, 그들을 상대로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결의가 더 굳은 사람들이 세력을 더 단단히 구축하게 됐다.

이란 지배자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수단이 있다. 첫째, 직접 생산한 대



이란 공격 이후 미국의 위신은 오히려 더 흔들리고 있다

량의 고성능 미사일과 드론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무기들을 제거하는데 실패했다.

둘째, 세계경제의 주요 길목 중 하나인 호르무즈해협을 옥죄는 능력이다. 이란이 후자를 무기로 사용하리라는 점은 명백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버락 오바마 정부하에서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지냈던 벤 로즈는 자신이 참여했던 모든 전쟁 모의 훈련에서 “이란은 언제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고 4월 6일 BBC 라디오에서 말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이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 4월 1일 연설에서 트럼프는 호르무즈해협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유럽과 동아시아의 미국 동맹들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용기를 내서 ... 해협에 가서 그냥 차지하면 되는 일”이라면서 말이다.

### 퇴위 선언

이것은 말하자면 퇴위 선언이었다. 국제관계론 교과서들에는 로버트 길핀이 쓴 다음 문장과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헤게모니 국가는 안보·재산권 보호라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대

가로 수익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다.”

말하자면, 헤게모니란 군사적·경제적 패권국이 모종의 보호비를 갈취해 자신보다 약한 국가들이 순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영화 《대부》를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려면 보호가 실제로 제공돼야 한다.

핵심 “공공재” 중 하나는 국제 무역의 해로가 막히지 않는 것이다. 미국은 이 책임을 영국한테서 가져왔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막판에 이란이 걸프만에서 유조선들을 향해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대표로 활동했고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다

공격 수위를 높이자 미 국방부가 개입해서 전쟁의 판세가 이란에 불리한 쪽으로 기울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또 다른 국제관계론 학자 스티븐 월트가 말한 트럼프의 “포식성 헤게모니” 하에서 미국은 이 책임을 포기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력·군사력상의 세력 균형 변화를 반영한다. 만약 “그냥 차지하면 될 일”이었다면 미국이 진즉 했을 것이다.

좌충우돌하는 트럼프는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요구하는 태세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미국의 오랜 동맹들은 더는 그를 믿지 않는다. 언론은 트럼프가 나토가 참전하지 않는 데에 격분했다고 보도한다.

이것은 양날의 검이다. 유럽연합 내 트럼프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총리 조르자 멜로니조차 이란 전쟁을 반대하고 이스라엘 제재를 지지했다. 세계 패권이 정말로 지각 변동을 겪고 있다.

출처 Alex Callinicos, 'Trump's 'predatory hegemony' gives way' (2026. 4. 06) / 번역김종환

##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 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인천

### 중동에서의 제국주의와 이란 전쟁, 한국군 파병 논란

일시 4월 8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 한국열린평생교육원 5층 강의실 (부평역 1번 출구 앞 50미터)

발제 이원웅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 실패와 팔레스타인 해방의 전망》 공저자

참가비 5,000원(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인천 지역 모임 문의 010-6224-2157 / incheon@ws.or.kr

서울

###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으로 보기

일시 4월 16일(목) 오후 7시 30분

※ 전문 통역사의 영어·아랍어 동시통역 제공

장소 서울 교원투어빌딩 지하 4층 강연장 (종각역 5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자 국제연락간사, 《러시아 혁명: 희망과 좌절》 저자

참가비 6,000원(학생·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지역 모임 문의 010-4909-2026 / wsorg@ws.or.kr

# 이란은 ‘트럼프의 베트남’이 될 것인가

트럼프는 이란인들을 “마땅히 있어야 할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전소, 전력망, 교량, 도로, 항만, 통신망, 공장 등 이란인들의 삶에 필수적인 핵심 기반 시설을 전면적으로 파괴하겠다는 위협이다.

이 표현은 미군 전 공군 참모총장 커티스 르메이가 1965년에 처음 사용했다. 르메이는 공습만으로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 시설과 민간 인프라를 구별하지 않고 공격하는 ‘전략 폭격’론을 신봉했다. 르메이는 10만 명 이상이 희생된 1945년 3월 도쿄 대공습을 지휘한 바 있다.

실제로 린든 B 존슨 정부는 1965년 2월부터 3년 넘게 북베트남의 산업 시설, 병참선, 군사 기지를 폭격했다. 존슨의 후임자 닉슨도 협상의 우위를 위해 북베트남을 대규모로 공중 폭격했고, 심지어 캄보디아로 확산했다. 그러나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했다.

베트남은 그 완강한 저항 때문에 미국 제국주의의 골칫거리였다. 만약 이번 이란 전쟁에서 패배하면 미국에게는 (이라크 전쟁은 물론이고) 베트남 전쟁보다 더 심각한 패배가 될 것이다.

베트남 전쟁 때 린든 B 존슨은 베트남 민족주의 세력과 협상을 하지 않고 전면전을 택했다. 미국 제국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원했기 때문이다. 존슨은 이렇게 말했다. “어느 한 곳에서의 굴복은 모든 곳에서의 패배 위험을 낳는다.”

트럼프도 쇠락하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잔혹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적 지배력의 변화에 따른 세계 재분할 과정에서 미국이 (특히) 중국에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대등한 경쟁자”의 등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명기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 미국 제국주의의 전략을 표현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저 미국 지배계급의 돌연변이가 아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바이든을 생각해 보라. 바이든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겪은 패배를 설욕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견제하려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 지금은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를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시키는 데 열심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세계 재분할 쟁투



볼타 버려진 미군 항공기. 파병을 비롯한 군사 지원 일체에 반대해야 한다

가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가져왔다. 제1차세계대전에서는 유럽의 강대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붕괴됐다. 제2차세계대전을 통해서는 자국의 ‘영향권’을 확대하려던 두 강대국 독일과 일본이 패배하고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승전국이 각자의 영향권을 거느린 양분된 세계가 등장했다.

트럼프는 “4~5일 안에” 이란을 중동의 베네수엘라로 만들어 흔들리는 미국의 패권을 회복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가자지구의 참극을 인구가 9,000만 명이 넘는 이란에서 재현하려 한다. 그러나 이 계획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납치는 세계를 경악케 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이란 이슬람공화국에서 만만찮은 반격을 당하고 있다.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못하는 트럼프, 격추당하는 미군 전투기, 이란 미사일에 공격당하는 미국의 걸프 연안 동맹국들, 유가 상승과 확산되는 경제 위기 등 “적의 실수”를 보며 자국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을 듯하다.

트럼프가 더 큰 패배를 피하고자 ‘타

코(TACO, 트럼프는 언제나 먼저 꼬리를 내린다)’를 할 수도 있다. 그는 공언한 ‘전면 폭격’을 세 번 연기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실추된 미국 제국주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 ‘승리’를 보여 줘야 한다는 커다란 압력을 받고 있다. 전쟁장관 피트 헤그세스를 비롯해 최고위 참모들은 이란 내 민간 인프라 시설은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라며 트럼프를 설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친 놈” 트럼프의 다음 행보가 무엇일지를 예측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는 아니다. 거의 모든 문제를 거의 전적으로 군사력을 통해 해결하는 “전쟁의 시대”에 들어선 오늘날,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을 맹렬하게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임무다.

## 반전 운동

트럼프는 파병 요청에 답하지 않은 이재명 정부에 불만을 터뜨렸다.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자 우파는 ‘동맹은 공짜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불만 표출이 이재명 정부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반전 대중의 직접적 타격권에서 (당장은) 비켜서도록 해주는 효과를 내는 듯하다.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의 인기 없는 전쟁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의 파병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신중하게 검토”하는 중이라며 시간 벌기성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와중에 위협하기 짝이 없게도 이재명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주한미군이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미군 전투기의 자국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일부 유럽 정부들에 비해서도 매우 유약한 태도다.

트럼프가 한국 등 동맹국들의 지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러저러하게 협력하는 것을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파병에 ‘신중한’ 듯하다 해서 반전 운동이 이완돼서는 안 된다. 상처 입은 아수가 위험하듯이, 위기에 처한 미국의 제국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비웃고 어떤 범죄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반전 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미국의 이란 전쟁은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세계 무역 시스템이 “지난 80년 중 최악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증시의 모든 지수가 계속 폭락하며 도처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한국 상장주식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 350조~400조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한국 등 전 세계 노동계급의 생활수준이 타격받고 있다. 물가가 급등하고 물자는 부족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이란 전쟁 반대와 한국군 파병 반대뿐 아니라, 가격 상한제, 임금 동결 반대와 임금 인상, 임대료 동결, 법인세 인상 등을 요구하며 대중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김인식

# 사우디·UAE 등 걸프 연안국들은 대(對)이란 공격의 한 축이다

김준효

언론은 걸프 연안국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를 전쟁에 ‘끼어 있는’ 신세로 다룬다. 그러나 이 국가들이야말로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을 가장 열심히 응원하는 곳들이다.

사우디는 전쟁 전부터 미국에 이란 공격을 촉구했고, 지금도 이란의 미사일 공격력이 파괴되고 이란이 중동의 ‘대리’ 세력 지원을 중단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라고 요구한다.

UAE는 일찌감치 이란 본토 공격을 포함한 “적극적 방어”에 나설 수 있다고 했고, 이후 “필요한 모든 수단을 써서 ... [이란에 맞서]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걸프 6개국 공동성명(3월 25일) 발표를 주도했다.

무엇보다 이 국가들은 자국 영토에 미군 기지를 제공해 왔다. 바로 이 기지들이 이란을 견제하고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을 도와 왔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는 미군 전투기들의 발진 기지가 되고, 이란 미사일과 발사 기지 등을 파악하는 기지다.

이들은 미군 전투기와 미사일 등이 통과하도록 자국 영공을 개방하는 등 미군의 이란 공격에 적극 협조했다.

이 미군 기지들과 그 부속 시설들이 이란의 공격 목표가 된 것이다.

## 천궁-II

이란은 지금까지 UAE에 1,400여기의 미사일·드론을 발사했는데, 그 목표는 미 공군·육군 핵심 전력이 배치된 알다프라 기지와 그 부속 시설들, 또 그 기지를 떠받치는 UAE의 ‘민간’ 시설들(발전소, 미군 숙박/도피 호텔 등)이었다.

한국이 UAE에 제공한 ‘천궁-II’가 바로 이 목표들을 방어하고 있다.

이란의 3월 27일 사우디 수도 인근 공격은 프린스 술탄 공군기내 E-3 센트리 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파괴했다. 프린스 술탄 기지는 중동의 미군 간 네트워크의

심장이었다. 그리고 E-3 AWACS는 이란 전쟁에서 미군의 작전 수행을 관장하는 공중 사령부였다.

양국은 미국을 거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이란과 참여하게 갈등해 왔다.

그 갈등은 이란의 친미 왕정이 타도된 1979년 시작됐지만, 2000년대에 미국이 이라크 전쟁·점령에 실패한 후 훨씬 첨예해졌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실패는 중동 지역 강국들이 역내 영향력을 확대할 공간을 열었다. 이란은 거기서 가장 큰 득을 봐, 중동 전역에 친이란 군사·외교 동맹을 구축했다.

사우디와 UAE도 (이스라엘과 함께) 그 역내 쟁투의 중요한 주체들이다. 사우디는 시리아와 예멘에서 이란을 상대로 대리전을 벌였고, UAE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이브라힘) 협정을 체결하며 군사·경제 모두에서 협력을 강화했다. 두 국가 모두 수단 혁명을 중간에 납치하고 붕괴시킨 내전에 개입했다.

둘 모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인종학살을 벌일 동안 거기서 얻은 군사적 노하우를 전수받는 비밀 회의에 계속 참가했다.

그런데 최근 2년 들어 이 쟁투의 형국이 바뀌었다. 특히 이스라엘의 학살 전쟁 과정에서 이란이 지원하던 세력들이 타격을 입으며 이란의 역내 영향력이 약화됐다.(관련 글: 본지 578호 ‘중동에서의 제국주의, 이란 전쟁, 한국군 파병 논란’) 이란 정권은 반정부 시위대 학살로 국내에서도 통치 정당성을 잃었다.

그래서 사우디와 UAE는 지금이 이란을 약화시킬 “절호의 기회”(빈살만)라고 여긴다. 그들의 전쟁 목표는 이란의 역내 영향력 투사 수단을 파괴·약화시키고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 피해와 자국민의 불만을 감수하며 미국을 계속 부추기고, 아예 직접 참전 카드까지 만지작거린 것이다.

이들의 이해관계는, 설령 트럼프와 이란이 모종의 (잠정)합의에 이르더라도 역내 강국들 간 쟁투는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걸프 연안국들은 자국 영토에 미군 기지를 제공했고 이곳이 이란의 반격 목표가 됐다

## 한국은 그들을 지원한다

이재명 정부는 수십 일 동안 호르무즈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과 선원 173명을 방치하고 있다.

이란은 “한국은 적성국이 아니”라며 협상 의사를 내비쳤지만(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 이재명 정부는 이란과의 1:1 협상을 거부했다. “미국·이란 협상과 관련국 입장”(외교부 관계자, <한겨레>)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재명의 말이 무색하다. 호르무즈해협 협의 선원들은 피격이 두려워 갑판 조명도 못 켜고 지내고 있는데 말이다(전정근 HMM 해상노조위원장).

정부가 이토록 선원들을 방치한 한 이유는 애초에 선박들이 발이 묶인 이유와 연관 있을 것이다.

문제의 한국 선박들은 미국과 미국의 전쟁 동맹들에 이득을 제공해 이란의 “전시(戰時) 제재” 대상이 돼 있다. 예컨대 S오일은 모기업이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이고, GS칼텍스는 미국 에너지 기업 셰브론이 지분 50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다.

또, 정부는 이란이 선박 통과를 대가로 UAE·사우디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 등을 요구할까 걱정했을 수도 있다.

이제껏 한국이 ‘천궁-II’를 판매한 국가는 UAE, 사우디, 이라크 단 세 곳이다. 모두 미국의 이란 공격을 돕고 있다. UAE는 이미 ‘천궁-II’를 실전 배치해 미군 기지

와 미군 지원 시설을 보호하고 있다.

또, 주한미군 기지에서 반출된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도 UAE와 사우디에 배치됐다. 한국 정부는 이 반출을 묵인했다.

한국은 특히 UAE와 관계가 깊은데, 그 역사는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 후 UAE를 상대로 핵발전소 판매를 로비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세일즈’의 결과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자랑한 중동 최초 핵발전소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

그렇게 건설된 바라카 핵발전소는 현재 이란의 보복 공격 목표로 지목돼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세일즈의 대가로 2010년 UAE와 비밀 군사 협정을 맺었다. 이 협상으로 UAE에 ‘비상사태’ 발생 시 한국군 자동 개입을 약속했음이 2018년에 폭로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조항을 고치겠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 폭로 두 달 후 문재인이 직접 UAE를 방문해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또, 한국이 UAE에 파병한 아크부대는 한국군 최초로 비전쟁국에 주둔하는 전투 부대로, 특전사·UDT/SEAL·해병대 병사들이 UAE 군경에 특수전 훈련을 시킨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 이란 정권을 정도 이상 자극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긴 하지만, 동시에 이란 정권이 뻔히 적대 행위로 간주할 군사 지원을 고수하고 있다.

# 교사 1,200여 명이 이란 전쟁과 한국군 파병 반대 서명을 하다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보름간 전국 초·중등 학교에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전쟁과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연서명이 진행됐다. 짧은 기간 동안 29개 교원 단체와 교사 1,258명이 서명에 이름을 올렸다.

4월 4일(토) 오전 11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이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조수진 인천 지역 교사(‘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교사들’ 공동운영진)는 “마감 기한이 지나고 소식을 알게 된 분들의 추가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서명을 진행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는 이란 전쟁과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뜨거운 정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학교·병원·주택을 폭격하며 어린이와 교사 등 무고한 생명을 무참히 살해한 이 전쟁 범죄자들을 가만두서는 안 됩니다 [는 정서 말입니다.]”

전교조 서울지부 대의원인 김미연 교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4월 4일 오전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이란 전쟁 반대! 한국군 파병 반대! 교사 기자회견'

를 폭로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란의 600개 넘는 학교와 교육 시설이 파괴됐고, 최소 230명의 어린이와 교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레바논에서도 단 20일 만에 120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100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김미연 교사는 이것이 “한 사회의 미래와 가능성,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뿌리째 뽑아 버리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

원장은 4월 1일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이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일침을 놓으며 발언을 시작했다.

박혜성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파병으로 “우리 교사들이 10여 년 전 가르쳤을 제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미국의 불의한 전쟁의 가담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에 맞서 “더 많은 교사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별 발언을 한 재한 이란인 코메일 소헤일리 감독은 이재명 정부가 “힘의 법칙, 정글의 법칙에 따르지 말라”고 호소했다.

“전쟁은 정의를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지켜 주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이 전쟁은 그런 목적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전쟁은 더 많은 침묵, 더 커다란 공포, 아무런 제재 없이 휘둘러지는 폭력만을 키울 뿐입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교사들은 학교와 전국 곳곳에서 전쟁 반대, 파병 반대 노력을 이어 나가자고 다짐했다.

교사들의 이번 연서명은 평범한 노동자, 서민들 사이에 전쟁 반대 여론이 광범하고, 이를 모아 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줬다. 이 연서명이 일터와 지역, 대학으로 반전 운동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준호

웹사이트에서 기사 전문과 더 많은 사진을 볼 수 있다.



# 이스라엘, 사형법 통과 — 인종분리 체제를 명문화하다

3월 30일 월요일 이스라엘 의회가 더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일 전망에 환호성을 터뜨렸다.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의도”로 살인을 했다고 판결받은 팔레스타인인을 처형할 수 있게 하는 사형법 개정안을 막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법은 찬성 62표 대 반대 48표로 통과됐다. 이스라엘 군사 법원에서 “테러리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인은 이제부터 기본 형량으로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

‘유대인의 힘’ 당의 극우 지도자 이타마르 벤그비르가 가장 앞장서서 이 법안을 지지했다. 벤그비르는 소름 끼치는 교수형 올가미 모양 배지를 옷깃에 달고 삼페인을 터뜨렸다.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그의 리쿠드당도 법안을 지지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벤그비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 유대·사마리아 지역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들이 누군가를 살해하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유대·사마리아”는 식민 지배자들이 서안지구를 일컬을 때 쓰는 명칭이다.

여기서 “아들”은 팔레스타인인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 애초에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리즘’이라는 범죄 성립 요건은 팔레스타인인의 정당방위 과정에서 일어난 살인과, 팔레스타인인의 땅을 강탈하려는 시온주의 정착자가 자행한 살인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 정착자 식민 지배

이 법의 목적은 뚜렷하다.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이 펴고 있는 폭력적인 정착자 식민 지배 정책을 제도적으로 더 확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다.

2025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월 ~ 2025년 9월 동안 팔레스타인인이 살해당한 사건은 1,509건에

이르지만, 그와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스라엘인은 단 한 명뿐이었다. 정착자들은 점령 군대의 면밀한 비호 하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날뛰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광범한 규탄을 자아냈다. 심지어 이스라엘 내에서도 대법원이 법 개정을 무효화하러 나서야 한다는 촉구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야만적인 가자 인종학살을 멈추기 는커녕 그것을 가능케 하는 데 도움을 줘 왔던 기구일 뿐이다.

몇몇 ‘자유주의 시온주의자’들은 이 법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민주주의’라는 ‘정통성’이 더한층 훼손될까 봐 걱정한다. 그러나 이 법은 일탈이 아니라 인종차별적 인종분리(아파르트헤이트) 국가의 산물이다.

이스라엘의 본질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한 강탈과 인종학살에 기초한 식민 정착자 국가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고 유대인

을 인구의 다수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억누르지 못해 왔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우경적 급진화가 일어나고 더한층 우익적인 세력이 등장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종분리 체제와 인종학살 사이에서 진자 운동을 해 왔다. 그러다 2023년부터는 인종학살 쪽으로 분명하게 방향을 틀었다.

서방은 자신의 중동 경비견 이스라엘이 제국주의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을 전폭 지지했다.

이스라엘의 이런 행보는 팔레스타인에 한정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끊임없이 폭격하고, 시리아의 골란고원 점령을 지속해 왔으며, 이란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다. 이스라엘의 식민주의적 팽창이 제국주의의 역학과 결합돼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역

▶ 7면으로 이어짐



## 레바논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 “미국과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며 사람들은 판세가 바뀌고 있다고 느낍니다”

레바논의 좌파 언론 ‘퍼블릭 소스’의 편집 위원이자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인 시몬 아사프를 본지 이원웅 기자가 인터뷰했다. 이 인터뷰는 4월 6일 이뤄졌다.

“애초 이스라엘의 계획은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1919년의 이스라엘 구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매우 오래된 목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것을 실현할 때가 왔다고 여긴 겁니다.”

그러나 며칠 전부터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를 장악한다는 계획을 포기하고 폭 3킬로미터의 ‘완충 지대’로 후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웠던 계획의 또 다른 요소는 레바논 정부를 압박해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이를 거역했습니다. 단지 고위 장성들만이 아니라 많은 장교들이 공개적으로 항명했습니다. 레바논에서 내전을 일으키기를 바라지 않는다고요.

이스라엘 전략의 세 번째 요소는 난민(주로 시아파 무슬림)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성격의 공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난민에 대한 연대는 레바논 민중의 중요한 정치적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의 ‘불만 아닌 불만’은 구호 식량이 넘쳐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난민을 도우러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이런 중요한 전략적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저항을 분쇄하고, 저항을 고립시키고, 지역 주민들을 고립시키는 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2006년[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

했던 해에 저항 세력 헤즈볼라는 민족해방 운동으로서 대중의 광범한 지지를 받습니다. 당시 헤즈볼라의 총구는 모두 이스라엘을 향했고 레바논 남부를 해방시키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광범한 지지를 얻었던 것이죠.

그러나 2012년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헤즈볼라가 당시 시리아에서 일어난 종파적 내전에 관여했습니다. 또, 헤즈볼라는 레바논 국가에 더 깊숙이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됐습니다. 갈수록 종파주의적인 주류 정당과 닮아 갔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 민족해방 운동이 갈수록 권력 핵심부에 가까워졌던 것처럼, 헤즈볼라도 익히 예상할 수 있는 경로를 밟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은 이스라엘이 확장주의적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는 늘 어느 시점에 이르면 결국 저항 세력으로서의 역할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헤즈볼라는 레바논 국가의 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항운동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헤즈볼라와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레바논 남부의 민중과 연대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진정한 변화입니다.

### 이스라엘 장성의 고백

최근 이스라엘 장성 하나가 “이스라엘 군이 더는 작전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 한 이스라엘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2년 동안 가자지구와 시리아 남부 등지에서 군사 작전을 지속하기도 매우 버거웠는데, 레바논 남부에서도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초 기대대로 헤즈볼라가 분쇄됐다면 일이 쉽게 풀렸겠지만, 헤즈

볼라는 여전히 똑같은 장소에서 버티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전세가 바뀌고 있고 미국에 재앙이 닥쳐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바논만의 일이 아닙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라크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미군과 나토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라크가 갑자기 매우 취약한 곳이 됐다고 느낀 것입니다.

시리아에서도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 의회가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사형을 법제화하자 시리아 남부의 다라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다라야는 2011년 시리아 혁명이 시작됐던 곳입니다.

시리아 남부 다라야와 쿠네이트라의 부족들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수니파 무슬림들에게 종교적으로 중요한 도시 하마에서도 대중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알레포에서는 시리아군이 가자를 해방시키겠다고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수백 명에 이르는 오토바이 시위대가 이스라엘군이 주둔한 골란 고원의 국경 지대를 돌파하려 해서 시리아 보안군이 더는 멀리 가지 말라고 간청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현재로서 시위대의 정서는 매우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이 곧 패배하게 생겼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갑자기 사태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시리아 지배자 알사리아는 친서방적인 방향으로 자본주의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하죠.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

라엘의 확장주의가 이 모든 꿈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사리아가 아무리 유순하게 굴어도 이스라엘의 확장주의는 시리아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중동에서 극적인 패배를 겪는 동안 시리아 정권과 레바논 정권이 처할 곤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판 수에즈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수에즈 위기란 1956~1958년 프랑스와 영국이 이집트를 침공했다가 역풍을 맞은 사건입니다. 지금도 그때와 유사한 면이 있고, 그렇다면 이는 걸프 연안국 정권들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라크 북부가 성난 대중으로 들쭉이면 쿠웨이트도 곤경에 처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유전이 있는 시아파 지역인 다라도 안전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곳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미국과 거래를 하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분명 미국과 거래를 할 것입니다.

이란과 미국 또는 서방이 거래를 할 때, 그 합의안에 레바논 남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까요? 아니면 그것은 이란 국경에 국한될까요? 이것은 전쟁 이후 커다란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중동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 벌어지는 싸움이 어느 싸움이 아니라 결정적인 싸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레바논에서와 같은 작은 승리가 아니라 훨씬 큰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층의 정서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본지 웹사이트에서 인터뷰 전문을 볼 수 있다.



### ▶ 6면에서 이어짐

내 경쟁자들과 힘을 겨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존재함으로써 저항한다. 자신의 터전에 남

아 있고자 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굳건함은 이스라엘에 위기를 가져다 준다.

팔레스타인 땅에 남은 모든 팔레스타인인들은 시온주의 지배 체제가 더 급진화하는 요인이 된다. 팔레스타인인들

의 저항과 항쟁이 분출할 때마다 이스라엘 국가는 팔레스타인을 제거하기 위해 더 잔혹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한 팔레스타인인들은 서방의 지지하에서 자신들

을 말살하려고 하는 국가가 자행하는 테러로 계속 고통받을 것이다. 이번 사형법은 이를 다시금 상기시켜 준다.

출처 'Israeli death penalty enshrines apartheid' (2026. 3. 31) / 번역 이원웅

# 지지율 하락에도 긴 눈으로 보고 더한층 극우화하는 국힘

김문성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지금, 여론 지형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하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격차는 1.5~2.5배에 이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대 격차다.

국힘 지지율이 저조한 것은 민주주의의 염원 대중에게 반가운 일이다. 국힘의 극우화에 대한 광범한 반감이 자아낸 효과이기 때문이다.

국힘 지지율이 20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그 지지층도 불만이나 실망이 크다는 뜻이다. 그 때문에 국힘은 자중지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실망한 지지층이 민주당 등 더 왼쪽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다.(무당층 증가)

따라서 지금의 판세만으로 지방선거에서 국힘이 대표하는 극우와 내란 세력의 대패가 예정된 듯 마냥 낙관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국힘 지지율은 국힘이 극우화하던 1~2월에 최대치였다가 이후 떨어졌지만 대선 투표 직전에 다시 결집했고, 국힘의 극우 후보 김문수는 41퍼센트나 득표했다.

## 격변기엔 두 달도 길다

지금은 선거가 두 달이나 남았는데, 평소의 두 달과 다르다. 현재 국내외 정세가 격변하고 있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노동자들의 생계난이 여전한 상황

서 한국 경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고유가·고물가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고통을 자아낼지 예상하기도 쉽지 않다.

예컨대, 이재명 정부가 전쟁 이후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지만, 3주만에 휘발유 가격이 제도 실시 전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경제적 고통이 깊어지고 길어지면, 국힘은 이를 이재명 정부가 무능하고 한미동맹에 충실하지 않은 대가라고 선동하며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다. 전통적 텃밭인 영남에선 2년 전 총선 때처럼 투표 직전 "미워도 다시 한번"이 재연될 수 있다.

지금 국힘의 장동혁 지도부는 고성국 등 당 안팎의 극우 운동가들과 연계해 당의 체질을 더 극우화하려고 한다. 당장은 선거에서 불리해 보여도 다음 총선, 대선까지 길게 보고 당의 체질을 더 극우화해 지방선거 후에도 당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 좌파가 강해서 극우 지지도가 낮은 것이 아니다

'윤어게인' 극우 연예인 이혁재를 심사위원으로 초빙해 치른 국힘 청년 후보 공개 오디션 최종 우승자 10인 중 4명이 알려진 극우다. 국힘은 이들을 모두 광역의회 비례 후보 당선권에 공천할 계획이다.

이처럼 털 주목 받는 기초의원·광역의원 후보로 청년 극우들이 공천되고 있다.

중대 선거구가 늘어나고, 진흥당 싸



국힘 청년 후보 공개 오디션 최종 우승자 10인 중 4명이 '빠박' 극우다

움 속에서 환멸이 커져서 투표율이 낮으면 어부지리로 여론조사와는 다른 성적을 거둘 수도 있다.

게다가 지금 극우의 지지율이 약화된 것은 진보당과 민주노총 집행부 등 좌파의 영향력이 커져서가 아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우파에 타협적인 중도·실용주의 노선을 편 효과이다. 중도층을 다수 포섭한 것이다. 우파층이 민주당 쪽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경우, 성공은 배신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국힘 지지율이 조금 회복할 기미가 보이면,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우파의 정책을 흠쳐서 인기 상실을 만회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벌써 이란 전쟁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간접 군사 지원을 하고, 이주민·난민에 대한 제도 개악을 하려고 한다. 이는 한미동맹 의존 강화 노선이나 인종차별적 배외주의

등 극우의 주장을 오히려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 확정됐거나 유력한 민주당의 주요 후보 면면들을 보면, 대부분 반극우 개혁파와는 거리가 멀다.

민주당 자체의 선거 프레임이 반극우보다 '일 잘하는 사람 뽑기' 등으로 이미 중도·실용화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띄운 뒤로 더 분명해졌다. 확정된 광역단체장 후보 중 국힘 출신이 벌써 2명이다.

반극우 정치가 민주당 밀어주기나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으로 귀결되지는 안 되는 이유다. 민주당과의 협력에 의존하지 않는 좌파적인 반극우 정치 운동이 필요하다. 그 운동은 제국주의 전쟁과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이란 전쟁이 야기하는 노동계급의 생계 고통에 대한 저항을 결합시켜야 한다.

## 김부겸이 반극우 후보라고?

극우 정치인이 국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대구시장 선거에 민주당은 전 국무총리 김부겸을 '모셔 왔다'. 회심의 카드라며 말이다.

그런데 김부겸은 지난해 '록브리지 네트워크 코리아'에 이사진으로 합류했다.

이 조직의 본체인 록브리지 네트워크

크는 트럼프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미국 부통령 J. D. 밴스, 마가 극우 지식인 크리스 버스커크 등과 만든 마가 운동의 엘리트 그룹으로 트럼프 현 정부의 최고 실세 그룹으로 꼽힌다.

일론 머스크와 최근 화제가 된 군사 기술 기업 팔란티어의 창업자 피터 틸 등 실리콘밸리의 우파 자본가들이 돈

을 낸다. 현재 백악관 비서실장, 국무부 장관, 국가정보국장 등이 그룹 멤버들로 트럼프의 국내외 전쟁에서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이 조직이 글로벌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외 조직 건설에 착수한 지역이 아시아다.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필요 때문이다(대만에도 지부가 있다). 이 글로벌 친미 극우 네트워크의 한국 지부에 김부겸 외에도 정용진(신세계 회장), 박재완(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 장관), 김해영(민주당 전 의원) 등

이 이사진으로 합류했다.

트럼프 핵심 극우 엘리트 그룹과 연계된 인물을 민주당이 필승 카드라고 내민 셈이다.

게다가 김부겸은 출마 선언에서 '계엄', '내란' 등의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니 홍준표가 부담 없이 김부겸 지지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대구시장 선거에서 국힘에 반대해 민주당에 투표하는 것이 진보적이거나 반극우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 정의당의 '이유 있는' 이재명 정부 비판

최근 정의당 전국위원회는 6.3 지방 선거 등 주요 사업계획을 결정했다. 서울시장에 권영국 대표가 출마하고, 광주전남통합특별시장에 강은미 전 의원이 출마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50여 명이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몇 가지 인상적인 자료들도 제출됐는데, 그중 하나는 '내란 전후 주요 의제의 언론 보도 언급회수 분석'이다.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미수 사건 전후로 각각 약 2년간의 언론보도를 조사한 것인데, 언론이 주요하게 다루는 의제의 비중이 확연히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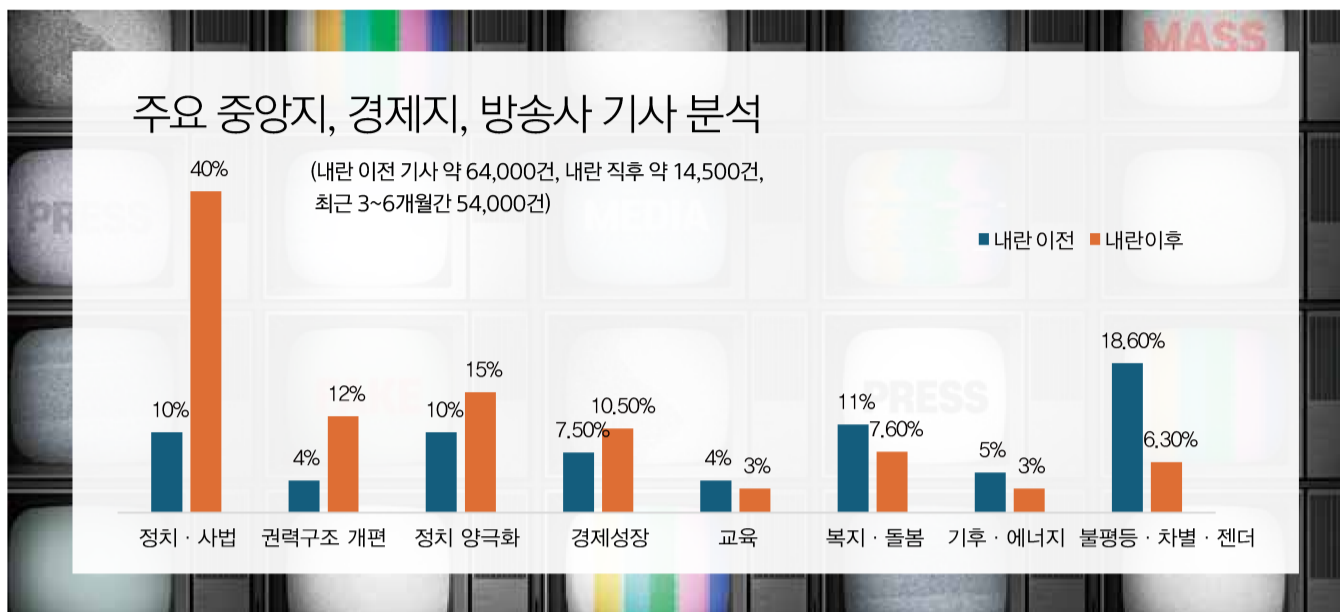
이를 보면 정의당이 그간 지적해 온 것처럼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불평등·차별·젠더, 기후, 복지 등 사회경제적 의제는 언론의 관심사에서 밀려나 왔음을 보여 준다.

이는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강조해 왔고, 무엇을 경시 또는 회피해 왔는지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쿠데타의 여파로 정치와 사법 관련 보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 이겠으나, 복지와 돌봄 등 분배 의제는 무려 31퍼센트나 줄었고 반면 주로 자본가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경제성장 의제는 40퍼센트나 늘었다.

요컨대, 이재명 정부는 '내란 청산'으로 표현되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적어도 말로는) 강조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뒷전으로 미뤄둔 것이다.

그러니 윤석열 파면 1년에 즈음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강조는 옳지만 정치적 민주주의와 연결시켜야 한다

정의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장' 중시 기조를 비판하고 '산재와의 전쟁', '차별금지법', '기후위기 대응' 등에서 전혀 개선이 없다고 비판한 것은 정당하다.(정의당 4월 4일 성명)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노동자 등 서민층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국제·외교 관련 보도가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이를 포함했다면 전쟁과 제국주의, 정치 양극화, 복지 후퇴 등 불과 몇 년 전과 크게 달라진 현실과 그로 인한 노동자·서민의 고통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정치와 사법, 정치 양극화에 관한 보도가 각각 300퍼센트, 50퍼센트나 늘었

다는 사실은 다수의 사람이 보기에 "내란 청산"이 여전히 미완이고, 극우의 위협이 현실적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윤석열 등 쿠데타의 핵심 주모자들에 대한 법적 판결이(그조차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닌데도) 어느 정도 이뤄지더라도 윤석열이 열어버린 판도라의 상자에서 튀어나온 극우를 어찌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국힘이 별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극우는 이제 저절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낱작 옆드려 있는 국가 기구 내의 쿠데타 동조 세력이 머지 않은 미래에 다시 이들과 손잡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정의당이 위 성명에서 "내란 세력은 법적으로 청산되고 있고, 내란 정당

은 스스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사회개혁 염원 대중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당의 압도적 강조는 이재명 정부의 치우침을 경계해 균형을 잡으려는 것일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서로 결합돼 있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식으로는 균형을 맞출 수 없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는 좌파 정당인 정의당이 스스로 주변화될 위험이 있다.

'사회대개혁'을 위해서도 지방선거 시기와 그 이후에도 극우에 맞서는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친위 군사 쿠데타에 동조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도 계속 요구해야 한다.

장호중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ws.or.kr/online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아침에 읽는 <노동자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엠코리아 현재호: 서울대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86가길 5 3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이메일: wspaper@ws.or.kr

ISSN 2005-8217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join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 노동자연대 TV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극우와 파시즘 분석과 과제
- 제국주의 질서의 위기와 한반도
-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69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지금 구독하세요!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그동안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

2021년 1월 1일부로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여성 운동과 임신중지권 운동이 만들어 낸 성과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는 2020년 한 해 인공임신중절 건수를 약 3만 2000건으로 추정했다. 이 조사에서 임신경험 여성의 17퍼센트가 임신중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임신중지는 적지 않은 여성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여전히 제약돼 있고, 임신중지의 부담과 위험은 여성 개인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지난 7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제도 마련의 책임을 방기해 온 탓이다.

최근 논란이 된 ‘36주 낙태’ 사건은 그런 현실의 단면을 비극적으로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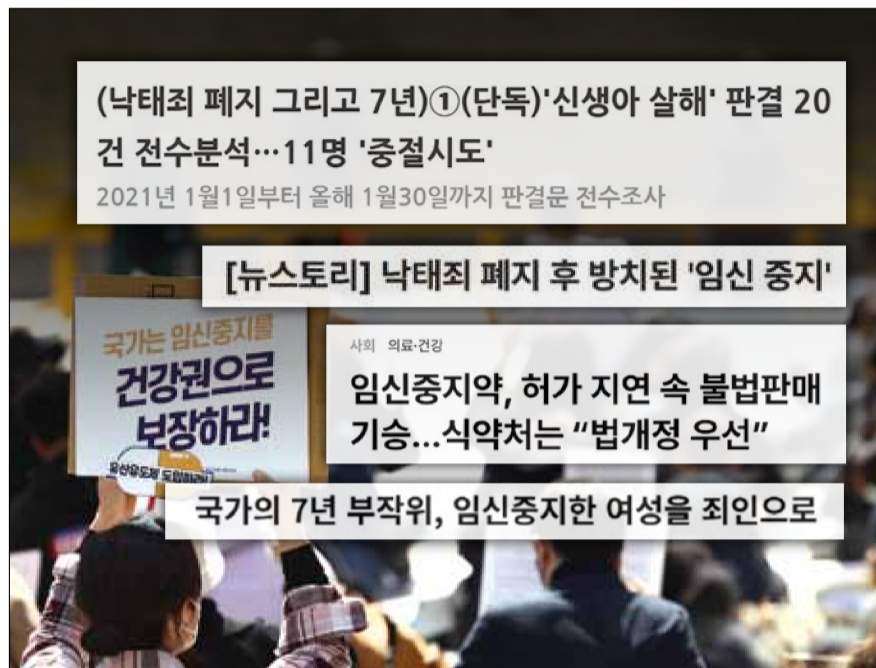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26세)는 임신중지 수술을 원했으나 임신 후기라는 이유로 병원 두 군데서 거절당했다. 그가 결국 의지한 곳은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인천의 한 병원이었다. 병원이 요구한 900만 원을 겨우 마련해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그는 살인죄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관련 기사: 본지 575호, ‘36주 낙태’ 여성 유죄 선고: 처벌은 여성을 더한층 궁지로 몰 뿐이다)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하는 평균적 시기가 임신 6~7주차임을 고려하면, A씨와 같은 비극적인 사례가 흔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외로 치부할 수만도 없다.

## 취약한 여성들을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다

A씨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2022년 8월부터 약 2년간 브로커 알선으로 500여 건의 임신중지 수술을 했다. 절박한 여성들이 더 있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영아 살해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들 가운데 임신중지를 고려· 시도



국가의 방치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접근하지 못한다

했으나 실패한 경우도 적지 않다. 관련한 최근 판결문 11개를 검토해 보면, 이 여성들은 대부분 취약한 조건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임신중지를 원했으나 실패했다.

B씨(직장인)는 파트너가 출산을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그의 도움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22년 1월 임신중지 수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임신 후기 상태라 병원에서 수술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인터넷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180만 원을 주고 구입해 이후 매일 2회 복용하였지만, 실패했다.

C씨(대학생)는 2021년 7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낳아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임신중지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결국 임신 35주차에 이르러서야 인터넷에서 약물을 구입해 복용했지만, 실패했다. 심지어 그 약은 아무런 유효 성분도 들어 있지 않는 가짜 약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D씨(주부)는 이미 4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2022년 9월 임신 사실을 알았고 수술을 받고자 했으나 경제적 이유로 그러지 못했다.

이 사례들이 보여 주는 바는 영아 살해의 비정함이나 무책임이 아니다. 정보 부족, 병원의 후기 임신중지 수술 거부, 비용 부담, 임신중지 약물이 불법인 상황, 가짜 약 등 제도 공백이 취약한 여성

들을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갔다.

임신중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상담, 적절한 의료적·사회적 지원이 제때 제공됐다면, 또한 후기 임신중지를 위한 조치와 가이드가 의료진에게 마련돼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

임신중지에 성공한 경우에도 여성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입법공백 시기 여성의 임신중단 인식과 경험 연구’는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이 연구는 2019년 4월 11일부터 2024년 11월 17일까지 임신중지를 고려했거나 경험한 19~49세 여성 640명을 조사했다.

그에 따르면, 여성들 대부분은 임신중지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접하고 있었다. 반면, 공공기관을 통한 정보제공과 상담 이용 비율은 낮았다.

임신중지 수술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487명 중에 상담이나 시술을 거부당한 비율이 20.5퍼센트에 달했다. 불쾌하거나 불편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9.5퍼센트였다.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보호자의 동의·동행을 요구하거나,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숙려기간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런 일은 또 다른 장벽이 된다.

임신중지 약물을 구입해 복용했다가 실패를 겪은 여성들도 적지 않았다. 약물로 임신중지를 시도한 159명 중 20퍼센트가 온라인 판매사이트,

SNS, 브로커 등의 경로로 약물을 구매했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런 비공식적인 경로로 구매한 경우, 산부인과를 통했을 때보다 실패 확률이 2~3배 더 높았다.

비용 문제도 여성들을 압박한다. 임신중지를 마음 먹었지만 최종적으로 하지 않은 119명 중 그 이유로 ‘높은 비용’을 꼽은 게 17퍼센트가 된다(복수 응답). 특히, 임신 중기가 넘어가면 비용이 크게 뛰었다. 연구진과 심층면접을 진행한 임신중지 경험 여성 중 임신 20주차가 넘은 경우에는 총 비용이 200만 원을 넘었다.

그런데 병원 상당수가 현금 결제를 요구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낙태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또 합법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위험 부담을 줄이려고 현금 결제를 받는 거라고 했거든요.”(심층면접자)

## 여전한 장벽

이처럼 처벌 조항이 사라져도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이 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임신중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제도 공백은 가난하고 고립된 여성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한다.

그런데도 보수·우파는 후기 임신중지를 앞장서 비난하며 임신중지를 대폭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힘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임신중지를 10주 이내에만 허용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임신중지 규제는 그 어떤 것이더라도 여성들의 고통만 키울 뿐이다.

한편,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지난 7년간 계속 원내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야말로 이 현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법제도 마련을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그럴 의지와 열의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7년 전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지권을 염원하며 싸웠던 여성들의 운동을 다시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있다.

성지현

# 민주당 김기표 의원 등이 난민법 개악안 발의하다

지난달 19일 민주당 의원 김기표가 난민 인정 신청을 제한하는 난민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4월 1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난민 인권 단체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기표 의원은 정부의 요청을 받고 이번 개악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반복적인 난민 신청을 제한하는 난민법 개악안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악안의 핵심은 법무부가 난민 신청을 심사도 없이 각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난해 법무부가 밝힌 계획은 난민 재신청을 제한하는 것이었는데, 김기표 안은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도 각하할 수 있도록 더한층 개악된 안을 내놓았다.

지금도 법무부는 난민에게 대단히 배척적이다. 난민 심사 인력이 부족해 난민 심사에 보통 수년씩 걸리고 난민 인정률도 1.45퍼센트로 매우 낮다. 그래도 난민 심사 기간에는 불안정한 상태로나마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난민 재신청을 하면 법무부는 대부분의 경우 체류 자격을 빼앗고 취업을 금지하는 엄청난 불이익을 주지만, 다만 출국 기한은 매달 연장해 준다.

그런데 법무부가 난민 심사도 없이 각하할 수 있게 되면, 어떤 난민들은 합법적 체류 기회 자체도 박탈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개악은 공항·항만에서 난민 신청을 제약하는 제도를 더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난민법이 개악되면 한국 정부가 서방 제국주의를 지원하며 이익을 챙기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난민들을 더욱 옥죄려 할 것이다**



지난해 10월 이집트인 난민들이 난민 인정과 안정적 체류 보장을 요구하는 행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공항·항만에서는 난민 심사에 회부할지를 일주일 기한의 간이 심사를 통해 판단해 왔다(‘회부 심사’). 이는 사실상 난민의 입국을 막는 구실을 한다.

지난해 회부 결정 비율은 29퍼센트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제대로 된 난민 심사도 받지 못하고 한국 땅을 밟기 전에 쫓겨났다는 뜻이다. 기존의 턱없이 낮은 회부 결정 비율을 보면, 이번 개악으로 상당수 난민 신청이 자의적으로 각하될 것임을 보여 준다.

개악안 발의 의원들은 난민 재신청이 많다고 과장하고 있지만, 재신청은 전체 난민 신청의 10퍼센트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낮으니 재신청률이 높은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 반복적인 재신청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돼 ‘선의의 난민들’이 제때 보호받지 못한다는 주장도 정부의 책임 회피일 뿐이다.

난민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난민심사관은 전국에 단 4명뿐이다(2022년 기준). 그러다 보니 1차 심사는 난민전담공무원들이 대부분 맡는데, 그들도 90명뿐이다. 한 해 1만 4,000건 넘는 난민 심사가 제대로 났을 리 만무하다.

여러 차례 재신청과 법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 끝에 난민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한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이 세 번, 나이지리아인 난민이 네 번의 재신청을 통해 난민 인정을 받았다. 2018년 친구들과 교사의 연대로 난민 인정을 받은 이란인 청소년 김민혁 군도 재신청에서 난민 인정을 받았다. 난민(재)신청 제한은 이런 난민들을 사지로 내몰 수 있다.

난민은 정치적 성격이 강한 이주민들이다. 예컨대 예멘인 난민은 주로 예멘 내전 때문에 발생하는데,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예멘 내전에 관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UAE와의 무기 거래 등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예멘 정부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비슷하게, 2023년 재한 이집트인 난민들이 한국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적극 동참하자, 윤석열 정부는 그해 말 정치 난민의 난민 인정을 자의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난민법 개악안을 내놓은 바 있다(같은 취지의 정부 발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10~11월 재한 이집트인 난민들이 난민 인정 촉구 행동을 벌이고, 11월 말 이재명 대통령

이 이집트를 방문해 독재자 엘시시와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법무부는 이번 난민법 개악 계획을 밝혔다.

2년 전 튀르키예와 이집트 정부는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해 협력 관계를 복원했고, 지난해 튀르키예 에르도안 정부는 이집트 군사독재 반대 활동가 난민을 추방했다.

난민법이 개악되면 한국 정부가 서방 제국주의를 지원하며 이익을 챙기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난민들을 더욱 옥죄려 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국제 정세가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시점에 난민법 개악에 나선 이 유일 것이다.

난민법 개악에 반대해야 한다. 임준형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대만 유사시 개입”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
- ★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 ★ 영화평 <힌드의 목소리>
- ★ 키클 트럼프, 파시즘, 국가



유가 상승으로 이미 생계비 위기로 허덕이던 대중의 삶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 턱없이 부족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으로 석유·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노동계급의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재앙적인 전쟁을 시작할 때, 이란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했다.

현재 국제 석유 가격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 개전 전의 거의 갑절로 치솟았다. 이재명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휘발유·경유 가격은 전쟁 전의 리터당 1,600원대에서 최근에는 2,000원을 넘는 가격으로 인상됐다. 평범한 사람들은 "주유소에 갈 때마다 가슴이 덜컥 덜컥"하는 상황이다.

설령 당장 내일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다 해도 석유 가격이 전쟁 전 가격으로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 공격, 그리고 이에 대한 이란의 보복으로 카타르의

가스 생산 설비가 큰 피해를 입었다. 카타르 당국은 이를 복구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

또, 폭격에 대한 우려와 저장 시설 포화로 중동의 석유·가스 시설 대부분이 가동을 중단했는데, 설비 폐쇄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를 재가동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전쟁이 확대될 경우 중동 전역에서 석유·가스 생산 시설 파괴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또, 예멘의 후티 군이 홍해의 해상 운송을 다시 방해한다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더해 세계경제에 더 큰 압박이 될 것이다. 이는 일부 국가들이 실제로 석유 고갈에 직면할 가능성을 뜻한다. 유가와 물가가 급등하며 노동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에 섰다.

한편, 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 정부는 급히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석유 가격 인상을 억제했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등으로 소비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식품 업계 등에게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압박을 하기도 했다.

4월 2일에는 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소득 하위 70퍼센트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씩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000억 원, 석유 최고가격제 정유사 손실 보전 5조 원 등이 포함됐다.

극우 국민의힘은 긴축 재정을 위해 정부의 추경을 반대하고 있다. 국힘 대표 장동혁은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

금'이 "선거용 대표 추경"이라며 이를 지급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국힘이 "추경을 한다면 환율과 물가는 더 오를 것이고 외국인 투자는 빠져나갈 것"이라거나 "현금 살포가 아니라 물가부터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노동계급의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금융시장 걱정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힘은 어이없게도, 태양광 발전 지원 예산이 포함되자 이를 "중국 추경"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힘의 주장과 달리 이번 추경은 노동계급 지원이 너무 적어,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게 문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치솟은 기름값 몇 번만 내면 다 써 버릴 정도로 적다.

## "달릴수록 적자"

이 와중에도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우선해 추경 규모를 매우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에 초과 세수 25조 2,000억 원만 사용하고 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심지어 1조 원을 국제 상환에 사용해 전체 국가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고 한다.

이렇게 정부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는 화물·택배 노동자 등이 타격을 받고 있다.

현행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

분의 50퍼센트만 보조하기 때문에 유가가 크게 오를수록 노동자들의 부담은 커진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달릴수록 적자"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게다가 석유·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인상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3월 소비자물가는 2.2퍼센트 올랐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보고서는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8퍼센트에서 2.7퍼센트로 대폭 상향했다. 고유가·고환율은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소비자물가 전반을 끌어올릴 것이다. 전 세계 비료 교역량의 33퍼센트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것이라 비료 부족으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도 예상된다.

특히 중동산 석유·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 때문에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1퍼센트에서 1.7퍼센트로 0.4퍼센트포인트나 낮췄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금리 상승 압력도 가중시키면, 이는 소비를 둔화시키고 세계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낼 수도 있다. 이미 취약해지고 있는 세계경제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금리 인상의 타격이 가해지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강동훈

전쟁이 확대될 경우 중동 전역에서 석유·가스 생산 시설 파괴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유가와 물가가 급등하며 노동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에 섰다